

# 시선

## 사설

### 전임교원 책임시수, 결국 책임감 문제다

‘경희대학교’가 여타 다른 대학교와 다른 변별성을 지니는 이유는 경희 고유의 교육철학과 가치관 덕분이다. 이것으로 인해 경희대학교는 경희 정신을 지닌 인재들을 매년 사회로 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경희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과연 무엇을 통해 경희의 교육 철학과 가치관을 함양하게 되는가? 가장 주요한 통로는 역시 ‘경희대학교에서 자신이 수강하는 교과목 강 의들의 총합’이다.

대학알리미 공식자료가 새롭게 갱신될 때마다 이목을 모으는 지표 중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임교원이란 대학이 그 학문적 역량과 교육적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경희의 철학을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발한 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임교원의 강의’라는 것은 곧 ‘경희가 인증한 교원을 통해 경희의 교육철학이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임교원 책임시수 문제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한다. 지난 2007년 18시수였던 전임교원 책임 시수는 현재 12시수로 대폭 축소돼 있다. 이것은 교수 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였다. 하지만 우리신문이 지난 제1589호 사설을 통해 서도 지적했듯, 2007년 이후로 8년여가 흐르는 동안 교 수 연구실적은 눈에 띄는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는 것이 대학 측이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교수, 특히 전임교원은 학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하이브레인넷에는 매일 수많은 젊은 학자들이 교원채 용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들고 있고, 캠퍼스 안에서는 무수한 신진연구자들이 시간강사라는 이름 아래 여러 개의 강의를, 학술연구교수라는 직함 아래 여러 개의 연구 성과를 감당하며 언제가 있을지 모르는 전임교원 전환을 꿈꾸고 있다.

물론 전임교원 책임시수는 대학의 필요에 의해 대학 이 앞장서 축소해온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와서 온전히 전임교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일일지 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은 ‘최고위 학 술기관의 학문적 중추’이자 ‘한국 사회의 지성’으로서 다른 구성원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극소수이겠지만 전임교원에 대 해 ‘강의는 시간강사에게, 연구는 학술연구교수에게 떠맡기고 자신의 권리 유지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적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 언급하는 것은 다소 과잉 이겠지만, 적어도 전임교원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 에 걸맞은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한다. 전임교원 책임시수가 2008년에 18시수에서 15시 수로 조정된 것이 당시의 시대적 요구였다면, 2015년에 12시수에서 15시수로 조정되려는 것 또한 작금의 시 대적 요구일 것이다. 그리고 그간 ‘줄어든 책임시수’가 곧바로 ‘확연한 연구성과의 증가’로 이어짐을 증명하 지 못한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국가경제는 물론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희 구성원의 대표가 되어야 할 교수들이 먼 저 기득권을 양보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줄 것을 기 대해 본다.

## 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 내년으로 미뤄져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1. 17 ~ 11. 2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10월말까지 예정됐었던 서울캠퍼스(서울캠) 증명서 발급기 교체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증명서 발급 기 교체, 구청의 허가 문제로 인해 내년으로 미뤄져/대 학주보 온라인, 2015.11.23) 노후화된 기존 증명서 발급 기를 교체할 예정이었다. 또한 접근성을 위해 문·이과대 학 건물 앞 심터(돌마루)에 부스를 설치해 이전할 계획 이었다. 하지만 돌마루에 설치될 옥외 부스에 관한 구청 의 허가 문제로 발급기 교체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가 홈페이지에 개 편 계획을 밝혔다.(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 개편한 다…“디자인 개선과 게시판 신설 및 통폐합 할 것”/대학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불필요한 오해 일으키는 모호한 규칙

##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규칙 만들어야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지난 25일,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는 제48대 총학생회 임원이 결정됐다. 단선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로 서울캠의 총학생회 선거는 3년 연속 단선 으로 진행됐다. 국제캠퍼스(국제캠) 또한 재작년 과 올 해 선거가 단선으로 진행되는 등 단선 선거 는 이미 익숙한 일이 돼버렸다. 그런데 이 같은 상 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 선관위)는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지는 경우에 대한 준비를 세심하게 해놓지는 못한 것 같다.

먼저, 중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진행과 관 련된 여러 규칙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을 보였다. 기자가 투표에 대해 취재하면서 중선관 위에 당선 조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선관위 관계 자는 “단일선본의 경우 ‘재학인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당선 조 건”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정확한 규정은 총 학생회 회칙 제60조 3항에서 ‘단독 출마인 경우에 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회원 2/3 이 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당 관계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엄밀히 말해 잘못된 것이다. 물론 며칠 뒤 관계자는 자신 이 잘 못 알고 있었다며 ‘투표인원의 2/3 이상, 즉 66.6%가 맞다’고 정정했지만, 선거를 관리하고 당 선을 발표하는 중선관위에서 당선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는 ‘모호한 선거세칙’과 ‘치밀하지 못한 중선관 위 의 인식’이 겹쳐져 벌어진 일이다.

중선관위가 노출한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캠에 서만 벌써 3년 연속으로 단선이 이뤄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단선 시 단일선본이 투표 인원의 2/3 이상 득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선관위 측은 “논의 후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결정한다” 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관점에 따라선 문제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답변이다.

‘단선으로 치러지는 선거’는 이제 ‘예외적인 상 황’이 아닌,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런 데도 단일 선본이 선거에서 ‘진다’라는 분명한 가 능성에 대해 명확한 규칙 제정으로 대응하는 대신 ‘일이 벌어지면 논의 후 결정’이라는 모호한 태도 로 대응하는 것은, ‘총학생회 선거’의 격(格)을 ‘상 황에 맞춰 그 때 그 때 대응하는 주먹구구식 선거’ 로 격하시키는 운영임에 다름 없다. 일부 학생들 사 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물 론이다.

단선으로 치러진 지난 3년 간 서울캠의 총학생회 득표율은 재작년 86%, 작년 75.03%, 올해 71.4%로 점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득 표율은 낙선의 경계선인 66.67%와 고작 4.73%밖 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다. ‘단선은 낙선이 없다’ 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빈틈없는 규정과 관 리자의 명확한 인식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세심한 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다.

## 비밀스러운 프라임사업 논의, 더 큰 화를 불러올수도

### 세시봉



황경선 <파트장>

프라임사업을 처음 만난 지난 7월, 당시 대학본부 측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라임사업에 대해 8 월 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 다. 그래서 8월 말에 바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계획’ 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데 직원은 9월 초에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 같으니 그때 전화를 직접 주겠다고 했다. 9월 초부터 셋째 주까지 기다렸지만 연락은 오지 않 았다.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조교는 ‘아직 논의 중이어서 10월 중순에 다시 전화 드린답니다’라 고 말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10월 중순이 다 가도록 전화는 오 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웬걸, 다음 달에 다시 연락을 달라는 것이다. ‘다음 달’ 로 미루기만 벌써 네 번째였다! 수차례 취재의 문턱에 서 고배를 마시다 보니, 구성원의 알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싶었다.

이후로도 대학 본부 측이 계속 답변을 회피하는 바 람에, 결국 프라임 사업에 대한 분석기사를 쓰면서 정 작 우리학교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학교 구성원에게 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취재 협조가 불가 능하다는 입장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핑계 로 취재를 교묘히 피해가는 대처방식이 아쉬웠다. 대 학본부는 아마도 ‘전략 유출’을 우려해 사업 관련 논의 에 대해 함구한 것일 테다. 하지만 구성원들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적어도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해명이라도 해야야 한다. 타 대학들은 전략 유출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며 ‘담당자’가 취재를 정중히 거 부했다. 번번이 조교의 목소리만 들려주던 우리학교 대학본부와는 상반된 매너였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 언론을 통해 프라임사업을 희미하게 접한 학생들, 특 히 학과 통폐합 논란에서 언제나 을의 입장에 서게 되 는 인문계 학생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 것인가.

대학본부는 프라임사업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 을 구성원에게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어야 했다. 전략 유출이 우려된다면 각 구성원 대표와 대학 언론에게 솔직하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논의를 구성 원 차원으로 넓히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전체의 대의를 훼손시키 지 않으면서도 소통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우리 이미 대학본부의 ‘습관적인 불통’을 작년 12월 의 ‘B0룰’ 사례를 통해 목도한 바 있다.

구성원은 중요한 학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 길 바랐지만, 교수들로부터 ‘대학본부의 지침으로 B0 룰을 당장 이번 시험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일방적 통 보를 받아 학생대표들이 나서 거센 항의를 했다. 대학 본부는 그제야 합의 없는 제도 강행을 사과하고 철회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본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를 ‘밀살’에 가둬두고 있다. 이제는 문제를 외부로 끌어내야 한다. 지난번처럼 유야무야 구성원 소통 과 정을 넘어가려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습하는 모습 말고, 논의 과정에서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 해 책임감 있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 여줘야 할 것이다.

## 알림

### 바로 잡습니다

우리신문 1599호 ‘법정부담금 비율 59.4%로 2년째 감소 법인 축, ‘모두 부담하기 힘들어’ 기사에서 본문 중 교비 회계 13년 약 180억, 14년 약 240억, 15년 약 300억이 흑자 를 기록한 반면 법인회계는 14년 약 220억, 15년 약 12억을 적자를 기록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법인 측 은 ‘적자와 흑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 어 교비회계는 예산대비 실적 초과 달성, 법인회계는 예산 대비 실적 미달이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전 | 편집장 박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희1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